

민주 “삼겹살에 소주 1병도 큰 부담” 정부 비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분동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지원 예산·대상 대폭 확대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고물가 국면을 우려하면서 “삼겹살에 소주 1병은 이제 서민의 친구가 아니라 서민의 부담이 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소주로도 속을 달래기 어려워진 국민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하다”며 “가게 사장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맥주, 막걸리까지 줄줄이 오르면 곧바로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코로나보다 더한 위기라고 한다”며 “매출은 반토막 났는데, 코로나 때 진 빚, 소비 위축, 경제 위기까지 몰려 장사하면서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다”라며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으로 분통만 터트리게 하고 있다”며 “7년 이상 영업해온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시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와 경제 위기가 업력 7년 이상이라고 피해 가는 것도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생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당장 업력 7년 기준 없애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 예산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거론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시나 민생에 대한 비삼함은 없었다”며 “혹독한 물가 인상 선두

에 섰던 공공요금을 잠시 동결하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공공요금 속도 조절을 말해도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인상 불가 피하다고 한다”며 “대통령은 말로만 비스한 각오이고 정부는 내놓는 대책마다 빗 좋은 개살구니 국민은 도대체 무슨 정부가 이러냐며 분노만 깊어진다”고 비판했다.

또 “고달픈 국민을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말고 명확한 대책, 분명한 후속 대처로 민생 제대로 챙길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특단 대책과 신속한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한 정책위의장은 “경제와 민생이 도탄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1년째 무역수지 적자가 쌓이고 있고 세계 경제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저 원전 타령만 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농림부 장관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민 위한 근본적 대책은 나몰라라 하고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신동진 쌀 퇴출이라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농심은 더 타들어만 간다”며 “복지부는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겠다고 번개탄 생산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고금리로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긴급생계비 명목으로 100만원 짚금 대출하면서 15.9% 이자 받겠다고 한다. 정부가 사채업자인가. 답답하다”고도 했다.

김정책위의장은 “난방비, 전기료, 택시요금 폭탄에 이어서 소주 한 병 6000원, 이젠 맘 놓고 소주 한 잔 마시기도 어려운 고물가 시대가 됐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 폭탄이 터지자 중산·서민층 지원대책을 세우라 했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를 반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벌써 레임덕이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중산서민층까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폐기한 건가.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양경숙 의원은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단순히 특정 주식 거래한 적 있다는 사실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 없다 등의 가이드라인을 검찰에 계속 하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제시한 서민중산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책은 언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오나”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난방비 폭등에 물가 폭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고가 극심하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짚금 대책은 이를 타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머지않아 여름 냉방비 폭탄도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尹 “강성 기득권노조 폭력·불법 방치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성 기득권 노조의 폭력과 불법을 말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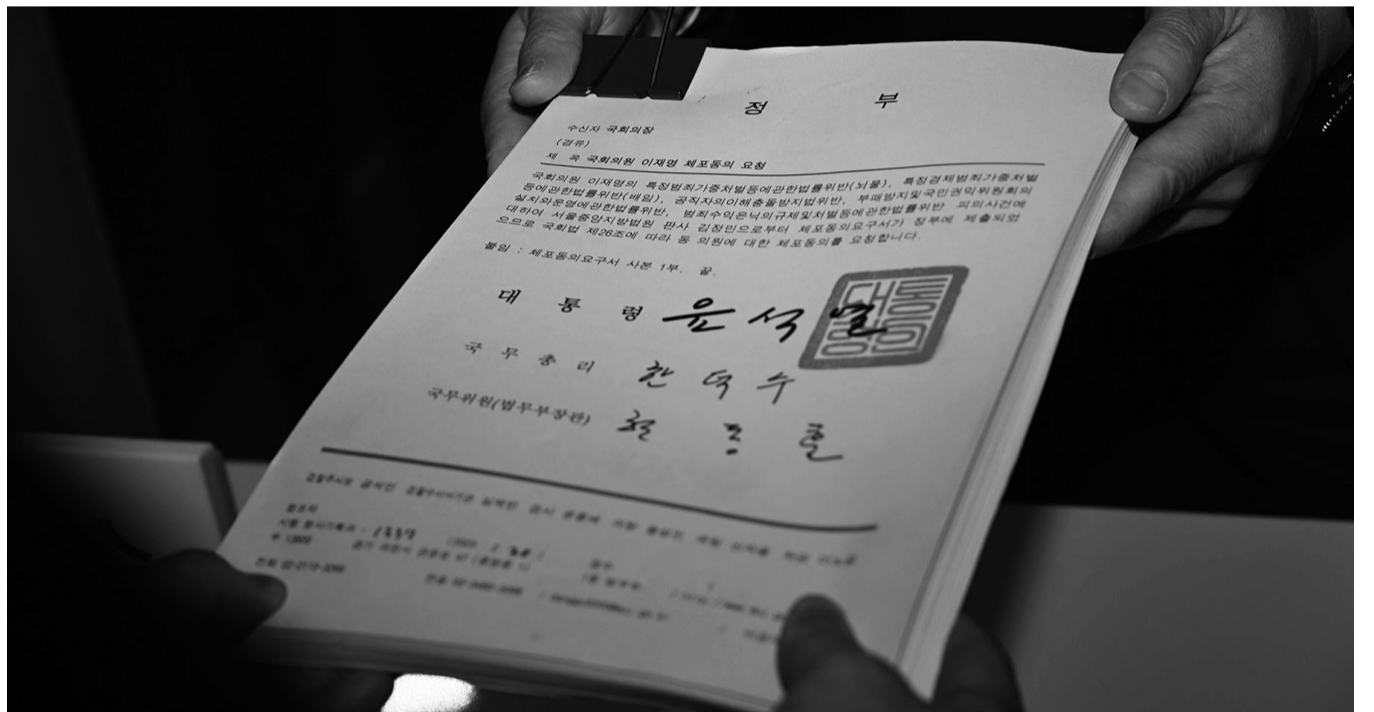
윤 대통령은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에 규정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 할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통신 분야 제도 개선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지나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21일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주철현 “농가 난방비·전기요금 급등… 추경 편성해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갑·사진)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촌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에 이어 난방비·전기요금 인상으로 3 중고를 겪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관심·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유가 폭등에 따라 등유는 올 1월 기준 l당 1497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6.3%, 농용유 면세유는 39% 인상됐다”며 “농사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3차례, 올해 1차례 등 4차례나 인상돼 62.8% 나 폭등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다. 주 의원은 “농식품부 장관이 ‘추경 불가론’을 고집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설득해 농가 지원 대책이 포함된 추경안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농가 지원 대책이 담긴 추경을 즉시 편성하고, 한전의 농사용전기 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하며 ‘농산업’의 법정 개념 도입으로 농식품부의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윤재갑, 해남·완도·진도 수리시설개보수 예산 134억 확보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사진)은 21일 농식품부 2023년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해남·완도·진도 15개 지구 사업예산 133억7000만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관내 신덕2·삼산·독점·송호·송현지구 등 5개 지구(총사업비 125억 규모)를 신규 착수지구에 반영시키고 설계예산 3억 8000만원을 확보했다.

또 교동·미력·상가·지산·용산지구 등 5개 지구(총사업비 191억 규모)의 금년도



준공을 위한 마지막 사업비 89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축·현산·팔산·남동·소포 지구 등 5개 지구(총사업비 297억 규모) 사업비 40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윤 의원은 “노후된 농업기반시설로 인해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야권, 국회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與 퇴장

국힘 “민주·노조, 자용동체 자백”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표결 직전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을 향해 “노조와 자용동체라는 자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환노위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6명 중 민주당은 9명, 정의당은 1명이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다 표결 직전 자리를 뒀다.

국민의힘 이기자 간사는 “대한민국 경제까지 파탄내려고 한다. 민주노총의 청부 입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성 노조의 불법을 합법화해 부추기고 장려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실제로 회계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노조와 그런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자용동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법사위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자.

야당은 법제사위 논의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 60일 넘게 처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에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된다.

또 주택수 합산에서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 주택도 추가된다.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개정령안에는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

외되는 사원용 주택 요건을 ‘공시가격 3억 이하’에서 ‘6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1주택 고령 가구의 연금계좌 납입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다.

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 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 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맞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안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김선욱 기자